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6면	제7회 강원 수출인의 날 기념식 오늘 개최... 유공자 표창 ...	1
江原日報	11면	원주세무서 앞 공영주차장 준공식	1
江原日報	03면	도교육청 전자철판 지원 예산 155억 전액 삭감	2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전자철판 보급 예산 155억원 전액 삭감	3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예결위, 내년도 교육청 예산 254억여 원 삭감	4
춘천MBC	온라인	도의회 예결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 예산 전액 삭감	4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지방의료원에 애정을 담아 응원	5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최재민 도의원	6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박호균 도의원	6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박대현(화천) 도의원	6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이무철 도의회 경제산업위 부위원장	6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김용래 도의원	6
江原日報	21면	[동정] 김희철(춘천) 도의원	6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6
江原日報	01면	道, 국제학교 설립 특례 만든다	7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도 전역이 특구화...유치 경쟁 과열	8
강원도민일보	02면	태백선 'ITX-마음' 정차역 축소 운행시간 단축	9
강원도민일보	04면	춘천 '접근성' 철원 '유휴지' 승부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10
강원도민일보	10면	이민1세대 'کم 온 원주', 역이민자 정착 돕는다	10
江原日報	04면	바다엔 오징어 실종, 농촌엔 병해충 위협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홍천 향채클러스터 신성장 동력으로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외국인 노동자 '강원 이탈' 우려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막 오른 총선, 정책·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해야	14
江原日報	19면	[사설]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시급하다	15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06

제7회 강원 수출인의 날 기념식 오늘 개최...유공자 표창 시상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 지역본부(본부장 박철웅)는 제60회 무역의날과 병행해 제7회 강원 수출인의 날 기념식을 14일 오전 11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전 세계 교역부진, 글로벌 경기위축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노력을 지속해준 강원 지역 기업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축하하고, 향후 강원수출 확대를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우철희 강원수출기업협회장을 비롯해 도내수출기업

인, 수출 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수출대상·수출유공·수출의탑·중앙표창 등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휴젤이 7000만불탑을 포함해 총 21개의 수출탑이 수여되며 12명의 유공자 표창도 함께 이뤄진다. 올해 강원 수출대상은 메디아나가 대상, 비피도, 웰코스, 레메디, 아시모리코리아, 대영씨엔이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한다. 특별상으로 수출 급성장 부문에 유성씨엔에프, 위온, 세준에프앤비가 받았으며 첫수출 달성 부문은 제네톡스 및 원스피리츠가 수상한다. 정우진

江原日報

2023 12 14 ()

11



원주세무서 앞 공영주차장 준공식 원주세무서 앞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13일 현장에서 원강수 시장과 이재용 시의장, 김기홍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예결위원장실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2023년 강원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논의했다. 박승선기자

도교육청 전자철판 지원 예산 155억 전액 삭감

도의회 예결특위 당초예산안 의결...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 수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학교 전자철판 지원사업 예산 15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3조9,70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열린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예산 규모는 254억9,643만6,000원이다.

예결특위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 앞서 교육위는 도교육청에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전자철판 지원 사업을 재검토한 뒤 추진하고 스마트기기 수업 환경지원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예산 낭비를 막아 달라고 주문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교육청의 전자철판 지원사업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예비심사대로 △학교 전자철판 지원 155억5,500만원을 비롯해 △스마트기기 수업 환경개선 27억8,000만원 △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26억9,456만원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34억3,845만원 △ESG 경영정책활성화추진 1

억7,841만원 등을 삭감했다.

또 현재 춘천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공무원 증 케이스 녹음기 지원 예산은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후 확대를 주문하며 5억원을 감액했다.

이무철 예결특위위원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 등이 대폭 감소됐지만 더 나은 강원 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봤다”며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일부 사업 조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03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는 13일 제324호 정례회 8차 회의를 열고 254억9643만원을 조정한 3조9709억원 규모의 202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의결했다.

김정호

도의회 전자철판 보급 예산 155억원 전액 삭감

예결특위 도교육비 7개 항목 삭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학교전자철판 지원비 155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를 의결했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무철)는 13일 제324회 정례회 8차 회의를 열고 254억9643만원을 조정한 3조9709억원 규모의 202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의결했다.

특위는 학교전자철판 지원비 155억 5500만원(전액)을 비롯해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비 34억3845만원(전액) △평창교육도서관 신축이전비

26억9456만원(전액)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비 27억8000만원(일부) 등 7개 항목 예산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특위는 교육위원회 삭감 내역을 그대로 반영했다.

전자철판 지원비는 '업체 선정 특혜' 논란으로 사업 재검토 후 추진을 권고하며 전액 삭감했다. 또, 평창교육도서관 신축이전비는 활용 계획 미비를 이유로,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비는 타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특위는 세계주니어태권도 선수권 대회 지원비 3억5000만원(전액), 공무원증케이스 녹음기 지원비 5억원(일부)을 삭감했다.

이설화

2023 12 13 ()



강원도의회 예결위, 내년도 교육청 예산 254억여 원 삭감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 3조 9,700억 원 가운데 254억여 원을 조정해 의결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전자철판 보급 사업 예산 155억여 원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 예산 34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예산 254억 9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삭감 예산은 모두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됩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최종안을 모레(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2023 12 13 ()

춘천MBC

도의회 예결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 예산 전액 삭감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도교육청의 내년 당초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춘천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 예산

3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5억 원 삭감, 도교육청이 춘천고 안에 추진하는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 34억 원 전액 삭감 등

7개 사업 예산 254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허주희

joohee526@naver.com

江原日報

2023 12 14 ()

19

강원포럼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렇다고 방만 경영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지출은 줄이고, 의료의 질 개선과 친절한 자세를 통해 환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에 의료원

온 나라가 의료 붕괴를 이야기한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응급의료취약지다. 특히 고성·양양지역은 더욱 열악하다. 지금처럼 필수의료분야 의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속초의료원이 문을 닫는다면 고성·속초·양양·인제지역의 주민들은 위급할 때 강릉의 대형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하는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의료원은 도가 설립했으니 문 닫을 리 없다고 믿는 게 맞을까?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내 5개 의료원 부채는 약 600억원이다.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병원당 평균 약 12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빚을

줄일 획기적인 대안은 있는가?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회복기에 들어왔으나 병상가동률은 60%를 밑돌고 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100%를 넘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일부 의료원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다.

물론, 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런 이유로 매년 시설·장비 보강, 인건비 지원을 위해 약 500억원이 넘는 국·도비가 투입되고 있다.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는 없지만 의료시장에서 공공병원이 살아남아 지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라는 국민, 도민, 시·군민과의 약속인 셈이다. 하지만 적자 감수가 무책임한 경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원들이 수당을 중복 수령하고 의료기기 구매 조기 납부할인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심지어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가 경영혁신을 강구하고 있는 와중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은 지역환자를 위해 기꺼이 병상을 내어주고 의료진은 방역복을 입었다. 나는 이런 의료원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끝났다. 1,000억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이 기대보다 부족했고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아쉽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이 주장들이 힘을 가지려면 우선 의료원이 자력으로 버텨내는 내공이 필요하다. 그런 힘 없이 쏟아붓는

지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의료원이 돈벌이에

내몰리지 않아도 진료

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강원 자치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의료원은 지역환자들이 원정진료를 다니지 않도록 하는 의료 버팀목이어야 하기에, 강원자치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원해야 하며, 의료원 직원들은 병원이 문 닫지 않도록 옹골차게 지켜내야 하는 그곳의 주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시민이자 도의원으로서 의료원이 힘들었던 10년 전 그때처럼, 코로나19 때처럼 앞으로도 애정을 가득 담아 의료원을 응원한다. 2013년의 진주의료원이 우리 의료원의 미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방의료원에 애정을 담아 응원

있다. 의료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법인 소속 민간인이다. 그런데 공무원처럼 호봉제 적용 및 법정수당, 근로기준법상의 수당, 비법정수당까지 수령한다. 의사 연봉은 알려져 있듯이 상한가를 치고 있고, 직원은 각종 수당이 더해져 동일 경력의 공무원과 비교하면 급여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3년, 적자 운영의 아이콘이었던 의료원에 대해 강력한 경영 개선 요구가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데자뷔일까?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의료원은 흑자 경영이 목적이 아니다. 그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10
최재민 도
의원은 14
일 오후 4
시 도의회
기획행정

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미래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
고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11
박호균 도
의원은 14
일 오후 3
시 도의회
세미나실

에서 열리는 치수연구
회 제1~2과제 연구용
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15
박대현(화
천) 도의
원은 14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
리는 2023년 강원여
성경영인대회에 참석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09
이무철 도
의회 경제
산업위 부
위원장은
14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스카
이 컨벤션에서 열리는
2023년 강원여성경
영인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11
김용래 도
의원은 14
일 오후 4
시 도의회
기획행정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
리는 강원미래정책연
구회 정책연구용역 최
종보고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12 14 ()



21
강원여성경영인대회
◇김희철(춘천)도 의원은 14
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스카이컨벤
션에서 열리는
강원여성경영인
대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09
박기영 도
의회 안전
건설위원
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
에서 열리는 다문화연
구회 연구용역 최종보
고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12 14 ()

01

道, 국제학교 설립 특례 만든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여론수렴 마치고 입법 착수
수소특화단지 등 70개 특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눈길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본보 지난 12일자 2면 보도)을 위한 여론 수렴을 마치고 입법에 착수했다. 국제학교 유치, 전국 첫 도지사-도교육감 선출 러닝메이트 시범 도입, 9년제 초·중 통합학교 지정,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특례도 많다는 점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2면

강원자치도는 지난 12일 강릉, 13일에는 춘천에서 ‘강원특별법 입법 과제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론수렴까지 마친 만큼 강원자치도는 다음 주 중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에 개정안을 보내 정부 부처별 협의에 착수한다. 3차 개정안에 반영된 특례는 총 70개다. 교육과 폐광지역, 첨단산업 육성 등에 무게가 쏠렸다.

올 5월 2차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고배를 마신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대표적이다. 도는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9,000명의 재학생을 유치할 경우 연간 3,687억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미 관련 특례를 보유한 제주 국제학교는 연간 국내 수요가 5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제적 역량이 입증된 외국계 법인이 강원지역 국제학교 설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별법 최종 반영 시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특례 중 하나다. 총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작은학교가 많은 강원지역 특성상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9년제 초·중 통합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됐다.

전국 최초로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함께 투표하는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 도입’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특례도 주목된다. 최근 동해·삼척 수소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수소산업이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특례 확보 시 기업 유치와 기술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수소특화단지 특례는 전북 특별법에도 포함돼 반영이 유력하다.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강원특별법 제정과 2차 개정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으로 통과됐었다. 3차 개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 강원일보는 13일 교육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원특별법 발전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 도입 특례를 심도 깊게 점검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01

강원도 전역이 특구화...유치 경쟁 과열

양극화 해소 정부 4대 특구 계획
교육발전·문화특구 등 지정 준비
춘천 기업혁신파크 결과 연내 발표

정부가 균형발전과 교육개혁을 목표로 한 다수의 특구 사업을 쏟아내면서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간 특구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며 4대 특구(기회발전·문화·도심융합·교육발전특구) 도입 계획을 지난 9월 발표했다.

각 특구의 핵심은 수도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4대 특구 중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문화특구는 지역 문화 자원을 육성,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산업·문화·주거 인프라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고 각종 규제가 해소된다. 정주여건도 대폭 개선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광역시 150만평·도 200만평)에 지정될 전망이다. 도내에선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 등 10개 시·군이 특구 유치에 나섰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두 차례(3월말·7월말) 비수도권에 시범지역을 지정한다. 각 시범지역은 3년간 30억~100억원을 지원받고 △유아 돌봄 △초·중고 교육개혁 △지역인재 유출 분야 교육 정책 등을 추진한다. 도내 5개 시·군(춘천시·원주시·강릉시·태백시·화천군)이 지정을 준비 중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전국 5대 광역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대상으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특구 사업을 평가해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특구는 이달 말 예비지역이 발표된다. 전국 40개소가 서류평가를 통과했다. 도내에선 속초시와 고성군이 예비지정 최종 결

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춘천시가 유치에 나선 기업혁신파크 공모사업 지정 결과는 연내 발표된다.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결과도 이달 말 나온다. 강원도는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안을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는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각종 규제를 받아와 정부의 각종 특구를 유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은 만큼 특구 지정 과정에서 강원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형

강원특별자치도·각 시군 특구 도전 현황
※ 정부 4대 특구
(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내년 상반기 지정)

• 춘천시 강원시 정밀의료융합 디지털바이오 기회발전특구

• 원주시 첨단반도체 융복합

• 강릉시 천연물바이오

• 동해 삼척시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

• 태백시 전략산업구축 (에너지 신산업 구축)

• 홍천군 첨단바이오 산업

• 횡성군 이모빌리티 특화산업

• 영월군 세라믹원료 소재

• 화천군 군남 클러스터

문화특구(연말 예비지정 지역 발표)

• 속초시·고성군 유치 도전

도심융합특구(내년 사업추진)

• 선도 사업지 선정, 5대 광역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대상

교육발전특구(내년 3월 초~7월 말 시범지역 선정)

• 춘천·원주·강릉·태백·화천 유치 도전

#기업혁신파크(연말 발표)

▶ 춘천시 유치

#글로벌 혁신특구(연말 발표)

▶ 강원도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02

태백선 'ITX-마음' 정차역 축소 운행시간 단축

양평·용문·양동역 3곳 미정차 합의
코레일 사장에 명예도민증서 전달

속보=태백선 ITX-마음 열차 내 '노선 끼워넣기' 문제(본지 8월 29일자 2면)가 해결되면서 열차 운행 시간이 3시간 이내로 단축되게 됐다.

지난 9월 1일 정식개통한 준고속열차 ITX-마음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 창출에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당초 열차 노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동역 등이 추가 운행되면서 실질적인 운행 시간 단축 효과는 18분(정량리~태백까지 3시간 6분 소요)에 불과, 철도의 최대장점인 속도를 100%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진태 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서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



13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태백선 ITX-마음 열차 운행 개선,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서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태백선 ITX-마음 열차 운행 개선방안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지사는 이날 면담을 통해 기존 정차역에서 3개역을 미정차할 경우 정량리에서 태백까지 총 2시간 54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이에 한 사장은 김지사의 건의를 수용, 양평·용문·양동 3개역에 대해서는 미정차하기로 협의, 열차가 3시간 이내로 운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ITX-마음 이용객 수가 하루 960여명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손실보

전금액 상당부분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지사와 한 사장은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결과, 오는 2024년 말까지 열차 운행을 재개토록 하고 중전 CDC(디젤액압동차) 셔블 열차의 운행 종료에 따라 새로운 운행 방식 도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김지사는 이날 면담에 앞서도 내 원활한 철도서비스 제공 및 태백선 ITX-마음 조기 도입 반영 등에 기여한 한 사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증서를 전달했다.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04

춘천 '접근성' 철원 '유흥지' 승부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

태릉선수촌 대체 부지선정 공모
각 시·군별 장점 피력 유치 총력
도 "중재 불발, 최종결과 대응"

대한체육회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공모에 강원도에서 춘천시와 철원군 두 곳이 뛰어들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공모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400m 규모의 훈련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선정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에는 국비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국제스케이트장 공모는 태릉선수촌이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철거 절차를 밟으며 이뤄졌다.



사진 왼쪽부터 춘천 국제스케이트장 예정지, 철원군이 아외빙상으로 준비 중인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015번지 군부대 유흥지 모습.

이에 춘천시는 역사성과 접근성을 내세우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전까지 대한민국 빙상 원류였다"며 "빙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완전한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1962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우두 강빙상대회, 1971년 제52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빙상대회를 치렀고, 1991년 동계아시안게임도 개최했다. 서울에서 춘천은 1시간 이동거리다.

철원군 역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를 희망하고 있다. 철원군은 스케이트장 부지의 군(軍) 유흥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철원군의회의원들은 지난 11일 정 부세종청사에 방문해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기준 철원군의회의장은 "철원군은 겨울

철 대표 휴한기 지역이자 많은 군(軍) 유흥지 활용이 가능해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성장할 조건이 갖추고 있다"면서 "철원이 관광도시로 성장한 이 시점에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강원도는 공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해 강원도차원에서 중재를 시도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며 "춘천, 철원이 각각 유치에 나서게 된 만큼 향후 발표될 최종결과에 따라 (도는)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내년 2월 8일까지 공모 서류를 받아 1차 도시를 선정한다. 실사 후 2차 심사를 한 뒤 5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경·김덕형

▶관련기사 9면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10

이민1세대 'کم 온 원주', 역이민자 정착 돕는다

인구유입 정책 추진 관광활성화
교류활동·정주여건 조성 지원
시 "교민 은퇴 후 거주지로 충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특별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키로 해눈길을 끌고 있다.

원강수원주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민 1세대 유입'에 초점을 맞춘 'کم 온 (Comeon) 원주'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는 고향에 대한 향수, 가족과의 재결합, 의료서비스 및 경제적 안정 등을 이유로 역이민을 고려 중인 이민 1세대의 니즈를 반영해 새롭게 구상한 인구유입 정책이다.

원주는 혁신·기업도시가 있는 도내 최대 도시로 사통팔달 교통망, 의료, 교육, 관광, 체육, 공원 등 잘 갖춰진 인프라, 우수한 자연 등 이들 교민의

은퇴 후 정착지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시는 부서별 총괄, 실무단, 홍보단을 구성하는 등 추진을 체계화 할 예정이다. 특히 '원주방문의 날' 행사운동을 통해 원스톱 상담서비스, 지역소개, 생활·혜택 정보가 담긴 웰컴 패키지를 제공, 이같은 정책과 원주를 교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원주장점과 매력을 브랜딩해 해외 교류도시 한인 사회에 홍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민 1세대의 원활한 원주 정착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지역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이들의 정주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원강수원시장은 "이민 1세대 유입시 원주가보다 개방적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투자 유치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며 "원주만의 특색을 부각, 호감도를 높이는 정책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해민

江原日報

2023 12 14 ()

04

바다엔 오징어 실종, 농촌엔 병해충 위협

속보=해수면 온도 상승과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이 반복(본보 지난 12일자 4면, 13일자 5면 보도)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 산업인 농·어업에 비상이 걸렸다.

동해안 겨울철 대표 어종인 오징어와 도루묵은 지구 온난화와 유생 수 감소 여파로 자취를 감췄고, 농업은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병해충이 급증하고 있다. 양양 등 도내 동해안 대표 어종인 도루묵은 최근 어

해수면 온도 상승과 따뜻한 날씨에 주력 산업 농·어업 초비상
동해안 오징어 대신 복어만 잡혀 ... 농가 돌발해충 피해 3.5배

획량이 급감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오징어의 빈자리를 복어가 채우면서 동해안 겨울철 어판장 풍경은 이미 변했다. 13일 찾은 강릉시 주문진항 일대 곳곳에는 복어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반면 오징어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징어 어획량 감소가 올해도 이어지며 어민들은 오징어 대신 복어를 잡아다 팔고 있었다. 30년 경력의 어업인 김승욱(75)씨는 “몇 년 전부터 오징어가 안 잡히기는 했지만 이제는 진짜 씨가 말랐다”며 “오징어 배를 처분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는

데 올해까지만 하고 오징어잡이를 그만둬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농업 역시 위기를 맞았다. 돌발해충을 비롯, 각종 식물 병해충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돌발해충 피해 규모는 1,784.7ha로, 2019년 509ha의 약 3.5배를 기록했다. 기술원은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겨울이 따뜻할 경우 살아서 농번기까지 번식하는 개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민들 역시 울상을 짓고 있다. 춘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이모(49)씨는 “매년 돌발해충이 늘고 심하면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올겨울 들어서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내년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병해충연구팀장은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돌발해충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어 추이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일 강릉원주대 해양생태환경학과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오징어 유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오징어 어장 분포도가 변화했다”며 “어민들의 생계와 오징어 보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어획량 감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준·박서화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 19

홍천 항체클러스터 신성장 동력으로

-특화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유치 지역 일자리 연계를

홍천군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돼 주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항체의 작용 원리를 이용해 만드는 항체 의약품은, 질병을 유발하는 인체 내 표적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항암과 면역치료 등 연구 범위는 다양합니다. 홍천에 항체 클러스터가 완성돼 관련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체 산업을 활성화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특화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조성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신종감염병 대응 백신 및 치료제 산업 육성을 위해 북방면 중화계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에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 항체산업비즈니스센터, 종합지원센터, 행복주택 등이 구축됩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미래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가 올해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지역의 기간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홍천군과 본지가 11일 개최한 바이오산업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항체 산업 발전에 대한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산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기업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 해외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항체 산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홍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기업 유치에도 진척을 보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앞서 이날 홍천군과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8개 입주기업이 공동 협약식을 했습니다. 클러스터 성공의 관건은 지역 경제 규모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항체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업과 주민,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4 ()

/ 19

외국인 노동자 '강원 이탈' 우려

-지원정책 불만족 정착 꺼려, 시군센터 신설 활성화해야

강원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은 현상이 비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탈강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한국어교육기관을 찾기 힘들다며 정착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타국살이에서 가장 긴요한 한국어교육조차 원활하지 않은 실태를 우려합니다. 생산성 확보와 인구 유지에 근간이 되는 청년층 및 젊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강원을 외면해서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제조업 및 고령화된 농림어촌 노동인력 수급과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외국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강원도 역시 외국인정책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으나, 강원엔 정착하고 계속 살고 싶어도 방해요인이 여러가지로 나타납니다.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 30대 중심이주노동자 407명 대상 설문 및 면담조사를 진행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직장근무, 주거환경, 여가생활 3대 항목 모두 불만족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 다친 경우는 3명 중 1명꼴이고, 욕설과 언어적 폭력 및 폭행도 3명 중 1명이 해당했습니다. 대개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은 질 낮은 수준임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

께 지내야 하고, 더러우며, 더위와 추위를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과 사회적 고립이어서 쉬는 날에도 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배울 곳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직장내 갈등이 생기거나 업무중 다쳤을 때 등 생활 고충과 법률상담 필요성이 크지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가는 지자체에서는 영세한 농가 부담과 주거시설 부족 상황 타개책으로 이주노동자 공공숙소를 설치해 양측의 권익과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물론 인권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오늘(12월 14일) 이주노동자인권 관련세미나를 열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합니다.

강원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 불만족도가 68%를 차지해 최대 걸림돌로 조사됐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예산 투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도 및 시군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센터가 없는 지역은 신설해 입국 초기부터 관리해 정착을 유도해야 이탈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 12 14 ()

/ 19

막 오른 총선, 정책·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해야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정치 신인들이 대거 나섰고, 8명의 현역 국회의원도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입지자는 총 12명이다. 전체 입지자가 40여명 규모임을 고려하면 4분의 1이 넘는 주자가 실제 선거전에 뛰어든 셈이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 19명이 등록했었다.

총선은 대한민국 향후 4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 어떤 선량들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국가 정책이 달라지고,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그중에서

내년 총선의 역사적 의미는 막중하다.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민생들의 고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도 그 어느 때보다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초점이 미래 비전 제시에 맞춰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동은 이러한 시대정신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시대정신은 고사하고 그간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는 비전 하나 내놓지 못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과거의 허물을 들추는 데 집중했다. 내년 4월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

상대 당과 후보를 헐뜯는 낡은 도식으론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유권자의 관심은 그보다 누가

민생과 경제 회복의 책임자인가에 쏠려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나라살림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남북 및 한·중, 한·일관계를 개선할 외교적 안목과 식견도 갖춰야 한다. 그런 만큼 미래로 승부를 볼 때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총선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살펴야 하지만 지역의 문제를 결코 등한시할 수 없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

닌 인사를 고르는 것 못지않게 넓은 시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민들

은 피해 의식에 젖어 살아왔다. 분단국가의 표상처럼 허리 잘린 땅에 일찌감치 변방으로 밀려났다. 군사보호 시설과 환경 보전에 가려 투자와 개발에서는 항상 뒷전이었다. 제한과 규제로 뭉뚱 묶여 움치고 뿔 여력조차 없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감해 온 주소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면적은 전국 면적의 17%를 차지한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스쳐가는 이들은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 환경을 부러워한다.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지역내 총생산은 국내총생산의 3% 정도에 그친다. 강원특별자치도 유권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나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골라내야 한다.

후보 혈투는 방식으로 유권자 관심 못 얻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살릴 대책·비전으로

진정성 갖고 유권자 접촉해 나가야 표로 연결”

江原日報

2023 12 14 ()

/ 19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시급하다

도내 1인 가구가 25만가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현행 다인 가구 중심의 지역 사회 시스템을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통계청의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전체 가구(68만5,000가구) 중 37.2%인 25만4,000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됐다.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다. 전국 평균 34.5%보다 2.7%포인트 높고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38.5%), 서울(3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도내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2.9%에서 2020년 35.0%, 2021년 36.3%로 나타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은 3,010만원이었다. 전체 가구 평균(6,762만원)의 44.5% 수준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 중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61.3%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자산은 2억94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2,727만원)의 39.7% 정도다. 주택을 소유한 1인 가구는 30.9%에 불과했다. 매년 급증하는 1인 가구는 평균 소득이 다인 가구보다 적고 주거·생활비와 빚 부담은 크다. 사회복지와 주거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령대별로 보면 도내의 경우 1인

가구의 23.3%가 70세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69세(20.7%), 50~59세(16.8%), 29세 이하(16.7%)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이 44.0%인 셈이다. 고령층 1인 가구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고독사다. 고독사 발생이 노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이혼과 실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된 경우 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대책도 필요하다.

1인 가구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단지 혼자 산다는 것만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대상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노년 사별 여성과 남성, 중년 이혼 여성과 남성, 미혼 젊은 남성과 여성의 경제 활동 유무 등에 따라 전략과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즉, 보다 세분화된 정책 설계와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여러 유형의 1인 가구 증가는 우리 사회의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사회 차원의 촘촘하고 치밀한 대응과 관심이 절실하다. 이제는 혼자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